

[시국토론회]

# 대한민국 생존과 안보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공동주최 ·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 ·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북한전략센터  
사회디자인연구소 선진통일건국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 시 국 토 론 회 】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일시 : 2019년 12월 23일(월) 14:00~17:00 /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

【 모 시 는 글 】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북한은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목표로 기만적인 협상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북한체제의 전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두운 핵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과 핵공갈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 등 핵균형 전략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뿌리 깊은 반미정서에 기반을 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국정기조로 한미동맹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2020년 한해는 미북간 군사적 긴장의 고조로 인하여 한미동맹도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반도의 핵시대와 한미동맹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프 로 그 램 】

개 회 14:30~14:45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환영사	·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중앙대학교 교수
	격려사	· 박관용 前 국회의장,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상임대표
	축 사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시국토론회 14:50~17:00	좌 장	· 허남성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발 제	· “한반도의 핵시대 : 핵균형 전략의 모색”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 원장
		· “한미동맹의 위기 : 가치와 비전”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담당 대사
토 론	· 문상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손용우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 【 목 차 】

- 【환영사】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前 통일원 차관 / 6
- 【환영사】 성동규 (재)여의도연구원 원장, 중앙대학교 교수 / 8
- 【격려사】 박관용 前 국회의장,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상임대표 / 10
- 【축 사】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성통만사 상임대표 / 12
- 【발 제】
- **한반도 핵시대: 핵균형 전략의 모색** / 16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장, 前 대통령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 **한미동맹의 위기와 새로운 동맹비전** / 24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前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 대사
- 【토 론】
- **안보위기의 근본 원인,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 36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前 대한민국 육군 준장
  - **토론문** / 42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안보연구소장, 前 국방부 대변인
  - **"한미동맹의 위기 : 새로운 가치와 비전의 필요성"** / 46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플랫폼 자유와 공화 상임운영위원장
  - **핵균형: 북한의 핵무장 對 한국의 핵무장** / 50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 환 영 사



나라의 운명의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상황입니다.

조선은 구한말 지구의 한구석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유럽의 함선이 서양의 선진문물을 일본 열도에 실어 나르는 개화의 시기에, 조선은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참담한 국권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을 맞은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한 선견 지명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근대 국민국가인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북중소라는 전체주의 공산국가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건국의 시대를 개막하면서도 당시에 불가능한 호국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은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부국강병의 토대 위에서 자랑스러운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리더십의 밑거름 위에서 군부정권과 문민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또 다른 민주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었고 성과와 한계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정직하고 근면하게 경제대국과 교육대국을 성취해냈습니다. 자유의 꽃을 피우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식과 이념의 융복합으로 말미암아 문명사적 대전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구촌 네트워크 공동체를 선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도 열린 마음과 도전정신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이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필사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대한민국은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철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좌경화된 정권이 구한말의 우물안 개구리 신세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의 판세를 잘못 읽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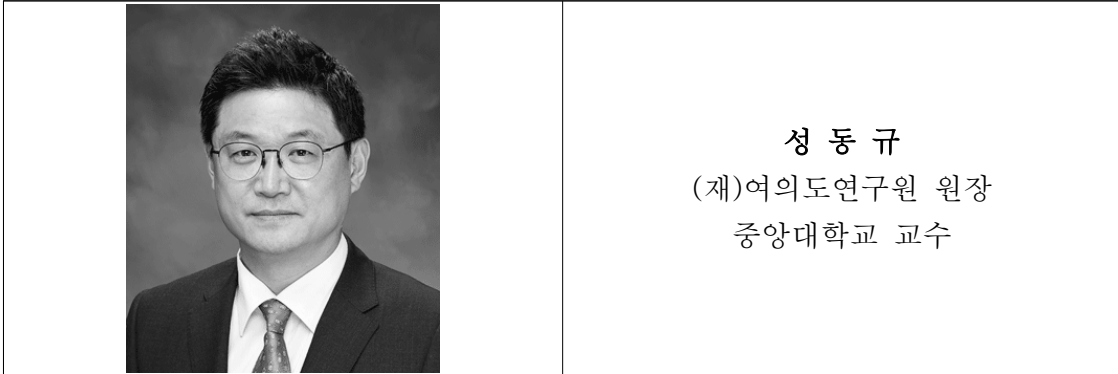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는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그릇된 판단과 국정 목표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정책은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한일관계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다음 세대는 불행을 넘어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주요 시민단체와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개최하는 시국토론회는 시의적절하며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취임한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님, 토론회를 이끌어주시는 허남성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귀한 발제와 토론에 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 12. 23**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김 석 우**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연구원 원장 성동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국대토론회 「대한민국 생존과 안보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과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 즉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북한전략센터, 사회디자인연구소, 선진통일건국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국방위기, 교육위기, 민생위기 등 어느 한 분야도 위기가 아닌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안보위기'입니다.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정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북한은 작년 '남북 정상회담'(판문점선언, 평양선언)과 '미북 정상회담'(싱가폴 선언)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이행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12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1차례의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일삼으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북간 비핵화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한 때 폐쇄했었던 동창리 시설까지 복구해 장거리로켓 엔진 시험을 수차례 실시하며 위기를 고조시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이런 도발과 위협에 당당히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권이 '위기 의식'과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대응 의지'도 없는 "3無"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온갖 對南 모욕과 빈정거림("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오지랴 떨어지마라")에도 적극적 대응은 커녕, 오히려 더욱 '북한 바라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의 文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 노력이 親北적이란 외면에도 '마이웨이'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평화라는 미명 하에 文정권이 추진해 온 '마이웨이'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안보파탄 △동맹균열 △외교고립 △국방약화 란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정권은 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우리는 더 이상 文정권의 안보 파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상황 만큼은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감에 서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그리고 국방과 동맹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설 대응책을 강구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가 바로 서고, 와해된 한미동맹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 내어 同 토론회의 사회, 발표,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분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3**

**(재)여의도연구원 원장 성 동 규**

## 격 려 사



박 관 용  
前 국회의장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상임대표

국가안위(國家安危) 노심초사(勞心焦思)입니다.

120년 전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위기 속에서 조선은 국정의 리더십과 방향을 잃고 국망(國亡)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국가의 최고이익인 생존과 안보를 지킬 용기와 지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 당시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가증스러운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은 더욱 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냉전적 세계관에 머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을 공존이 아닌 적대세력으로 간주하면서 패권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은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결속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트럼프 정부는 역내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역내 가장 위험한 세력은 핵무기까지 틀어쥐고 있는 전체주의 북한입니다. 강도의 칼은 살상무기라고 하는데 북한의 핵은 평화가 아닌 전쟁의 책임은 자명합니다. 이제는 날만 새면 핵공갈과 핵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북한의 핵그늘 속에서 살아가면서 패배의식은 만연하고 정신무장은 해제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유훈인 핵무장 사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비핵화 협상은 김정은 정권의 핵사기극을 연장할 뿐 아니라 핵무장

고도화의 시간만을 벌여줄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혹은 북한체제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허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반미와 반일정서에 뿌리를 두면서 친북과 친중 노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3불정책의 약속, 지소미아 파기 시도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한미동맹도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자강능력은 떨어지고, 동맹전략은 실종되고, 군세방안은 전무합니다.

2020년 경자년 나라 안팎의 사정은 더욱 어두워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천시(天時), 지리(地理), 인화(人和)를 얻는 자는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모원려(深謀遠慮), 지피지기(知彼知己), 유비무환(有備無患),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한미동맹의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핵균형 전략의 모색과 한미동맹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국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동주최로 참여해주신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환영사와 축사를 해주시는 김석우 원장과 김태훈 상임대표께도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이끄는 허남성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탁월한 발제를 맡아주신 전성훈 전원장과 이용준 전대사, 토론에 참여해주신 문상묵 센터장, 김민석 논설위원, 김대호 소장, 손용우 박사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의 값진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9. 12. 13**

**前 국회의장 박 관 용**

## 축 사



김 태 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성통만사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외 귀빈을 모시고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와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대한민국 생존과 안보위기 대처방안에 관한 시국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급진전됐던 미·북 관계가 2018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의 대결 상황으로 회귀하는 조짐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미국이 제재 완화 등에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나섰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17일에는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이 2017년 군사옵션을 다시 꺼내 북한 선제타격 작전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후 1년 6개월간의 대화 국면이 사실상 '비핵화 쇼'였다는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17년 말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ICMB 시험발사 및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촉발된 제3차 북핵 위기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하나의 좋은 기회이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미북 비핵화 쇼를 주선하여 아무 진전 없이 해결의 골든타임만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김정은이 북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미북 양쪽을 억지로

마주 앉혔다가 뒤탈이 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양쪽에서 신뢰를 잃었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한국 대통령을 아예 제쳐놓고 양자 간에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겠다는 태세입니다. 무모한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고 눈가림 합의로 북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부디 오늘의 토론회에서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님, 이용준 전 북핵대사님의 발제와 문성묵 센터장님, 김민석 논설위원님, 김대호 소장님, 손용우 박사님의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대처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 발 제 】**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 원장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담당 대사

# 한반도 핵시대 : 핵균형 전략의 모색

전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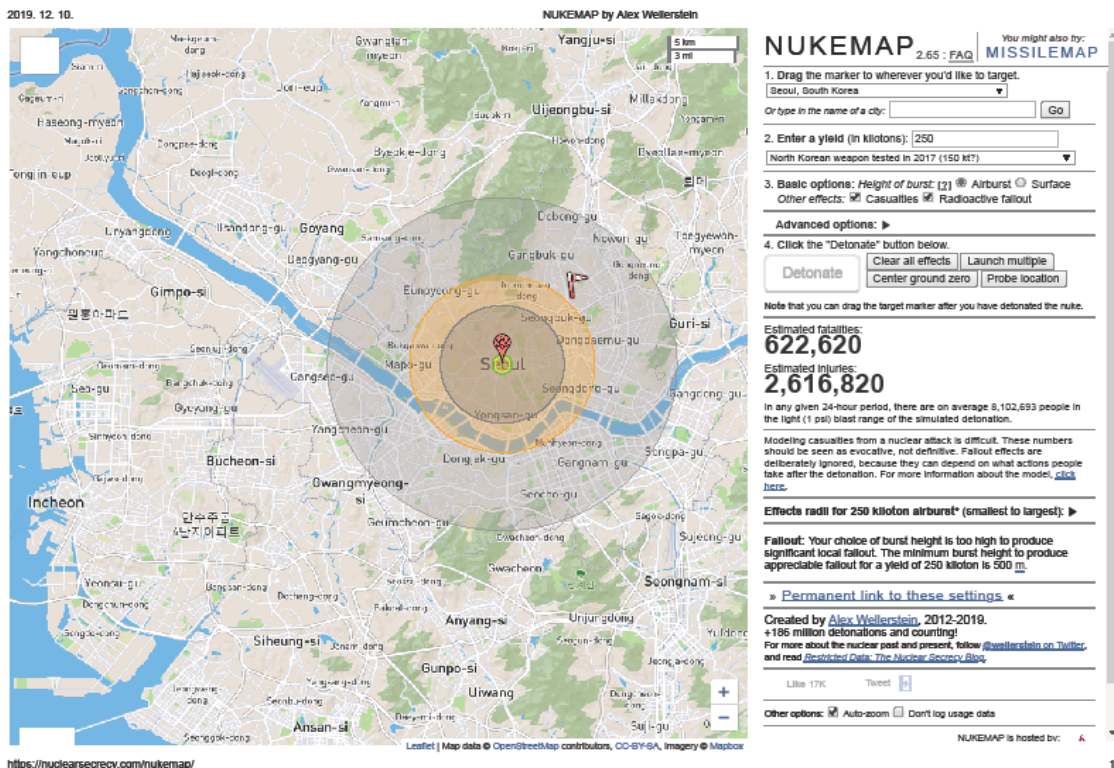
前 통일연구원장

前 대통령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 I. 북한의 핵독점과 한국의 핵인질

핵을 독점한 북한이 핵이 없는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다. 비유컨대, 칼을 든 강도가 집안에 들어온 겪이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수소탄 실험이었다. 핵분열에 기초한 원자탄의 위력이 최대 수십 킬로톤(kt)인 반면 핵융합에 기초한 수소탄의 위력은 최소 수백kt에 달한다. 서울 광화문 상공에서 6차 핵실험과 비슷한 규모인 250kt의 수소탄이 터지는 경우 Alex Wellerstein이 개발한 핵공격 피해 예측 모델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사망 622,620명; 부상 2,616,820명 (<https://nuclearsecrecy.com/nukemap/>).

<표 1>: 서울 광화문 상공에 250kt 핵폭탄 투하시 피해 범위와 규모 예측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냉엄한 교훈이다. 1945년 지구상에 핵시대가 열린 이래 군사적으로 참여하게 대치한 경쟁국들은 모두 상대의 핵에 자체 핵개발로 응수했다. 적대국의 핵에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래식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이다. 한 국가의 재래식 전력을 다 쏟아 부어도 상대의 수소탄 한 발을 당할 수 없다. 핵무기는 핵국이 비핵국을 상대로 거침없이 협박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비핵국으로서는 방어가 불가능한 핵국의 절대무기다.

<표 2>: 6·25 전쟁시 전사/사망 및 부상 (2,888,347명)

6·25전쟁 피해 규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사/사망		부상		실종 및 포로	
한국군	137,899명		450,742명		32,838명	
유엔군	40,670명 (미군: 36,940)		104,280명 (미군: 92,134)		9,931명 (미군: 8,176)	
북한군	520,000명(부상자 포함)				120,000	
중공군	148,600명		798,400명		25,600명	
민간인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	복한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1,500,000
	피난민(320만), 전쟁미망인(30만 여명), 전쟁고아(10만 여명)					

김정은이 핵포기를 약속했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북한의 핵포기를 믿지 않는 국민이 80%에 달한다. 여섯 차례의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폐기에 진전이 없자 비핵화 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좌절감이 분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핵개발 단계에 있던 나라들은 외부의 압박과 설득으로 핵을 포기했으나 핵을 완성한 나라는 체제변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사례뿐이다. 남아공은 흑백정권 교체기라는 내부 요인으로, 우크라이나는 공산주의 붕괴라는 외부 요인으로 급격한 체제 변화를 겪으며 스스로 핵을 포기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도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 핵의 인질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재래식 전력에 의존하며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던 구태의연한 비핵화 외교부터 용도 폐기해야 한다. 북핵위협에 우리도 핵으로 맞대응 하면서 북한의 핵사용과 위협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할 경우의

국민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국가안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길은 분명히 비핵화 외교에 비해 훨씬 힘들고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그러나 국가존립의 위협에 당당하게 맞서 국민과 후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길이다.

## II. 러·북의 「핵확전 우위」 전략과 미국의 「핵전-재래전 통합」 전략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발간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는 러시아와 북한의 전술핵능력 확충과 「핵확전 우위」(Nuclear Escalation Dominance) 전략을 극도로 경계했다. 러시아가 기존의 3축체제를 개량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ICBM, 초음속운반체, ICBM급 핵어뢰를 개발했고,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해서 對美 우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은 B61 계열의 핵폭탄 300여개에 불과하지만 러시아는 단거리탄도핵미사일, 탄도탄요격핵미사일, 대함핵미사일, 핵어뢰, 핵폭탄 등 육상, 해상, 공중을 망라하여 11종에 달하는 2,000여 개의 전술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핵탄두의 경량화와 다종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주요 운반수단은 단거리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앞으로 초대형방사포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핵탄두 운반수단의 다양화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은 김정일이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한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당중앙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의 핵억제력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틀어쥔 우리가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면 저들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끝장이라고 보면서 최후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채택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립계전핵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미국은 러시아가 전술핵 우위를 바탕으로 국지전이나 저강도 분쟁을 일으킨 후 다양한 전술핵 옵션을 구사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으며, 북한도 러시아와 비슷한 오판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침공해서 영토를 장악한 후 NATO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전술핵을 쓸 수 있다는 것

이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백령도나 경기 북부의 요충지를 점령한 후 전술핵으로 한미동맹의 개입을 차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오판을 막고 강력히 억지하기 위해서 전술핵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적대세력의 전술핵에 1:1로 맞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핵을 먼저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연하고 다양하게 핵옵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핵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전과 재래전에 대비한 군사계획을 통합하고, 미군의 조직과 자원배분을 조정하고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의 핵 선제사용 등 앞으로의 전쟁에서 핵이 사용될 가능성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예하 부대 차원에서 핵전과 재래전을 통합하는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정비하며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및 일본과 통합 과정을 조율하고 핵역지력 강화에 따른 부담을 공유하고자 할 것이다. NPR에서 동맹과 함께 핵역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한 만큼, 북핵위협에 대한 한미의 공동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인질 신세인 우리가 서둘러서 대비했어야 할 문제인데, 미국이 먼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북핵을 실존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전술핵 재배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시사한다.

### III. 한반도 핵시대의 핵균형 전략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속된 재래식 균형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10년 후인 2017년 7월 ICBM 발사와 9월 수소탄 실험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美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핵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려는 미국에 엄청난 부담 요인이다. 냉전 당시 NATO 회원국들이 과연 미국이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소련의 핵공격을 무릅쓰고 파리와 함부르크를 방어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듯이, 이제 한국도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독점한 가운데 미국의 對韓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문제까지 제기되면서 한미동맹도 창설 이후 최대의 도전에 직면해있다.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후에도 핵우산(확장핵역지)을 제공했다. 본토에 배치된 ICBM, 장거리폭격기 및 핵잠수함에 탑재한 SLBM으로 한국을 보호한

다는 약속이었다. 1978년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핵우산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었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수사적인 의례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제적인 위협으로 등장한 만큼, 핵우산 약속이 단순히 말의 성찬에 머물러선 안된다.

북한의 핵도발을 억지하려면 대북억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그 지름길은 한국이 핵옵션을 행사해서 북한 핵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핵 對 핵'의 균형이 맞춰지면 북한의 핵독점으로 인한 정치·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전략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관계와 같이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핵균형 전략의 타당성은 이미 유럽에서 검증된 바 있다. 지금도 5개 NATO 회원국의 여섯 개 공군기지에는 미국의 전술핵탄두가 배치되어 있고, 회원국과 미국의 전투기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표 3>: 미국 전술핵탄두의 유럽 배치 현황 (2014년 현재)**

국가	공군기지/항공기	저장고	B61 전술핵탄두
벨기에	Kleine Brogel/ Belgian F-16A/B	11	20
독일	Buchel/ German Tornado	11	20
이태리	Aviano/ US F-16C/D	18	50
	Ghedi Torre/ Italian Tornado	11	20
네덜란드	Volkel/ Dutch F-16A/B	11	20
터키	Incirlik/ Turkish F-16A/B	25	50
<b>총계</b>		<b>87</b>	<b>180</b>

Hans Kristensen, *B61-12: The New Guided Standoff Nuclear Bomb*, presented to the Third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 fo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United Nations, New York, May 2, 2014.

한국의 핵균형 전략은 두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 트랙은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트랙은 미국의 전술핵폭탄을 들여와 한미 양국의 전투기가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은 두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최종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입장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비확산정책 및 국제규범을 고려하여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하지만 미국이 거부하면 생존의 마지막 수

단으로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체 핵무장 옵션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대신 전략핵을 공유하자는 등 실체가 모호한 핵공유협정 체결 주장이 많으나 전술핵이 빠진 핵공유협정은 재료도 없이 요리책만 갖고 음식을 만들겠다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다. 미국은 영국과도 전략핵을 공유한 적이 없다.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괌 등에서 전술핵을 들여오면 된다는 주장도 역지의 기본에 무지한 잘못된 생각이다. 역지의 핵심은 전진 배치와 현시 효과다. 위기가 고조되는 경우 전술핵을 들여오는 행위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북한이 먼저 핵을 쓰도록 자극할 것이 자명하다. 힘든 일을 피하려는 “NYMBY” 정신, 꼼수와 편법으로는 북핵의 인질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의 핵균형 전략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한다.

【1단계】 1991년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에 의해 폐기되었음을 국가차원에서 확인함으로써,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의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



【2단계】 트럼프 행정부 말까지 미북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되 북핵폐기에 실패하는 경우 2021년 1월부터 핵균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준비에 착수한다.



【3단계】 정부차원의 핵정책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핵무장의 기술적 가능성과 정치, 외교적 타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미국과 핵우산강화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진행한다.



【4단계】 전술핵 재배치에 합의하는 경우, 미국은 일정 규모의 전술핵탄두를 들여오고 한국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F-35A(Block IV)를 도입한다. 양국은 핵탄두 저장고 건설, 군사교리 개발, 교육과 훈련 실시, 관련 협정 체결 등 핵공유 체제를 구축한다. 전체 과정은 핵의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않는'(NCND) 정책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5단계】 한미가 대북 핵억지 태세를 구축한 후 북한에 대해 『남북미 3자 핵군축 협상』을 제의하고 핵균형에 입각한 한반도 핵시대를 우리가 주도한다.

#### IV. 전술핵: 한미 핵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 핵시대의 인계철선

트럼프 행정부가 NPR에서 동북아에 전술핵탄두를 전진 배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명시한 만큼, 전술핵 재도입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이 핵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했던 금기를 깨고 한국을 핵시대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전술핵을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유럽의 NATO처럼 한반도 핵시대에 걸맞게 차원 높은 아시아의 핵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다.

과거 재래식 균형 시대에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인계철선이었다. 주한미군의 전투기는 북한을 향해 폭탄 한 발 투하하지 않으면서 대북억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북한도 수많은 국지도발을 했지만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한 도발은 없었고, 미군에 대한 도발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인계철선을 잘못 건드리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전술핵 재배치로 핵균형 시대가 열리면 전술핵은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뒷받침하는 핵시대의 인계철선이 될 것이다.

전술핵은 미국이 펼치는 핵우산의 우산살 하나를 한반도에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유사시 핵우산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제기되는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서 철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최단거리에서 양국이 핵자산을 공유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무기로 남한을 정치·군사·심리적으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술핵은 한반도 핵시대에 미국의 확고한 對韓 안보 공약의 상징이자 인계철선이다.

#### V. 북핵폐기의 새로운 길

30년 동안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교훈은 북핵문제를 특정 대통령 임기중에 해결하겠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하고, 군사공격을 해서라도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핵을 가진 북한과의 경험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되, 남북교류의 맥을 끊지 않고 북한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북핵폐기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오직 국민과 함께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겠다는 결의, 국가존립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민족을 어우르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만이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 이 시대는 프랑스를 핵국으로 만든 드골, 히틀러의 평화 함정에서 나

라를 구한 처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경제부흥의 지도자 박정희와 같은 선견지명과 불굴의 의지를 갖춘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길은 당면한 북핵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보호」와 핵을 가진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사회가 변화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핵을 포기하고 통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평화통일」을 두 축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북한에 핵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기존의 정부시스템은 한반도 핵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북핵대응체제로 개조해야 한다. 핵억지력 강화와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호태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조직, 군사전략과 교리, 대외 및 대북 전략, 사회교육과 국민통합 등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공격으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북핵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매월 방공훈련을 하는 하와이와 대비태세를 갖춘 캘리포니아의 벤투라 카운티를 타산지식으로 삼아, 북한의 핵공격이 초래할 재난사태를 상정하고 강력한 방공망, 민군 방호태세 및 국민교육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핵을 가진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관리하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평화통일 추진한다. 핵개발의 주체인 북한정권과 피해자인 주민을 구분해서 정권은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하되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족애를 발휘해서 돕는 정책, 즉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이원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핵폐기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민주적으로 결집해서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실상을 깨우쳐 사회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정보를 유입하고 외부와의 접촉기회를 제공해서 북한사회의 건설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계획은 언제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한미동맹의 위기와 새로운 동맹비전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前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 대사

## 1. 한미동맹 위기의 배경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동안 한미관계는 한국의 민주화 문제, 인권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 통상문제 등을 둘러싸고 가끔 큰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그로 인해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 적은 없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당시 민주화와 인권 문제로 한미관계가 큰 홍역을 치를 때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주로 대북한 정책상의 이견으로 한미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그것이 한미동맹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한미관계의 통상적 갈등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한미동맹 위기설이 워싱턴과 서울은 물론 멀리 유럽에서까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경시 풍조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역시 노골적인 친중, 친북 정책으로 미국을 격분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고 한미관계의 위기 해소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양국관계 위기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가 현실화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 (1) 친중 정책에 따른 위기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정부의 일관되고 노골적인 친중 정책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중 패권경쟁의 본격화로 냉전시대를 연상시킬 만큼 격렬한 미·중 패권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은 두 나라 사이의 경쟁의 차원을 넘어 점차 친미진영과 반미진영 간 대결,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전체주의 진영 간 대결, 세계 문명사회와 비문명사회 간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은 북한 핵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문제,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문제, 한반도 평화협정 및 종전선언 문제, 미사일방어 문제, 화웨이 제재문제 등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부분의 현안들에서 중국 입장에 동조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불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중국 굴종외교의 상징인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약속'은 한미동맹과 정면 상충되는 '안보주권 포기각서'이자 '대중국 충성서약서'이기도 하다.

외교 분야 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은 남중국해의 광활한 영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과 불법 점거에 항거하는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불참하고 있고,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밀무역을 단속하기 위한 미, 일,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7개국의 합동해상작전에도 불참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해 온 합동해상훈련도 기피하고 있고, 미국이 군사보안 문제를 이유로 실시하는 화웨이 제재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미.중 쟁점현안 관련 한국의 정책

미.중 쟁점현안	미국입장	중국입장	한국 정부의 선택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가입	가입 반대	가입 요구	창설회원으로 가입(박근혜정부)
중국군 전승70주년 열병식 참석	참석 반대	참석 요구	박근혜대통령 참석(박근혜정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강력 반대	영유권 주장	반대입장 표명요청 거부(박근혜/문재인정부)
한미일 3자 안보협력/합동훈련	강력 희망	강력 반대	협력 회피, 사실상 와해(박근혜/문재인정부)
미사일 방어망 설치	배치 희망	강경 반대	사드기지 가동불허, '3불약속'(문재인정부)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 문제	해제 반대	해제 주장	중국/북한 입장 동조(문재인정부)
북핵문제 해결 방식	일괄타결	단계적 해결	중국/북한 입장 동조(문재인정부)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반대	찬성	적극 추진(문재인정부)
한미 합동군사훈련	적극 희망	강력 반대	3대 합동군사훈련 폐지(문재인정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문제	참여 요청	참여 반대	참여 거부(문재인정부)
대북한 밀무역단속 합동해상작전	참여 요청	참여 반대	참여 거부(문재인정부)
화웨이 제재문제	동참 요구	불참 요구	불참 입장(문재인정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정부의 이러한 친중적 성향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좌파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우파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이미 미국 진영을 떠나 중국 진영으로 기울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있다. 헨리 키신저와 앨빈 토

플러를 포함한 많은 미국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통일되거나 중국 패권의 시대가 오면 중국의 영향권에 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한반도 통일도 중국의 패권시대도 요원한 현 시점에 한국은 벌써부터 친중국 행보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해, 워싱턴 조야에는 친한파 인사의 씨가 말랐고 한국의 동맹 이탈과 중국진영 편입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 (2) 친북 정책에 따른 위기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정부의 현저히 친북 편향적인 외교안보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과거 노무현 시대를 훨씬 능가하는 친북 정책노선이 추구되고 이에 친중 정책까지 가세함에 따라, 북핵문제, 대북정책, 군사안보문제 등 대부분의 북한 관련 핵심 현안들에 있어 한미 양국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불협화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한국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를 교섭했으나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는 어느 나라도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2017년 말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ICMB 시험발사 및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촉발된 제3차 북핵 위기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좋은 기회이기도 했으나, 문정부가 주선한 미·북한 '비핵화 쇼'의 와중에 아무 진전 없이 해결의 골든타임만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핵 문제 외에도 한미합동훈련 중단, 9.19 남북군사합의,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문제, 북한의 밀무역 단속을 위한 합동해상작전, 대북한 군사적 압박 등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양국간의 극심한 견해 차이로 한미동맹이 60여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른 미국 정부의 강력한 거부반응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습하려는 움직임은커녕 거의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다. 이로 인해 한미관계 악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고,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한미동맹의 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는 2018년의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한국군의 전반적 방어태세 이완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고려연방제의 천년왕국을 꿈꾸는 세력들에게는 불감청고소원의 축복이 될지도 모르나, 대다수 국민에게는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다.

### (3)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파괴에 따른 위기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 세 번째 이유는 한국 정부에 의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파괴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이념적,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민족주의를 선동하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기도하는 등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근간인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파괴를 주도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민족주의 캠페인이 본의 아니게 한.미.일 삼각협력을 파괴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김일성의 이른바 '갓끈 전술' 개념에 따라 한일관계 파괴를 통해 삼각협력체제와 한미동맹을 타파하는 것이 궁극적 의도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초 의도가 무엇이었던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지난 11월 23일 지소미아 파기 시한을 앞두고 미국 정부로부터 작심한 듯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으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별다른 무마 노력을 기울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정책을 변경하거나 하다못해 그럴싸한 해명이라도 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별다른 이의나 우려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지소미아 폐기통보의 효력정지라는 미봉책으로 일단 최악의 파국은 면했으나, 이 문제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불씨를 품고 있는 사안이다. 과거 1993년 초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핵비확산협정(NPT) 탈퇴를 선언했으나,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NPT 탈퇴효력 보류'라는 묘한 방식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전술을 쓴 바 있는데,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는 여러 면에서 이와 유사성이 많다.

만일 당시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 한.미.일 협력체제를 파괴하는 것이 처음부터 한국 정부의 숨은 의도였다면, 이것은 단순한 획기적 대외정책 변화의 차원을 넘어 한국이 건국 이래 소속되어 온 국제정치 진영을 아예 송두리째 바꾸려는 원대한 전략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수립 이래 70년간 한국은 미국과 서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일원이었고, 수십 년간 아태지역을 포함한 세계무대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벌이는 다양한 외교적 공동행동, 합동군사훈련, 다국적 연합군 등에 참여함으로써 각별한 유대를 맺어왔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국제 문명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구성하는 핵심 국가들이기도 하다.

그런 한국이 돌연 방향을 급선회해 세계 공산주의-전체주의 진영의 대표격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결성한 '북방 삼각체제' 카르텔의 문전을 기웃거리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모두 과거 6.25 남침의 주역이었고, 미국이 이란과 더불어 최대의 잠재적국으로 간주하는 나라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떠나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공산주의/전체주의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평화와 안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통일, 경제적 번영 등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이들 북방 삼각 체제에 합류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배신하려는 한국에 대해 보여줄 인내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 2. 한미동맹 악화가 초래할 대가

### (1)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한미 동맹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우선적으로 주한미군 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유지비 총액에 해당되는 약6조원의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무시하면서도 굳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원한다면 마땅히 주둔비용 전액을 '용병료'로 지불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것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을 테니, 이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의결하기는 했으나, 여러 조건들이 부수되어 있어 절대적 금지조항은 아니다.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기갑여단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이 나라 외환시장과 대외신인도 및 외국인 투자에 큰 타격을 주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이 전략적 고려상 주한미군을 절대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하지 못하리라는 견해가 좌파진영은 물론 우파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다. 미국은 박정희-전두환 시대부터 수차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시도했다. 미지상군의 대부분을 철수하고 **주한미군을 공군 위주로 재편성** 하려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의 일관된 소망이었다. 그것을 외교협상을 통해 만류하고, 방해하고, 미국 의회와 언론까지 동원해 번번이 좌절시킨 것은 바로 한국 정부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주한 미지상군 철수라는 미국 국방부의 오랜 꿈은 아직 유효하며, 미국 의회가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에 반대할지 의문이다.

## (2) 한미동맹의 격하 가능성

한미 동맹관계의 악화는 양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북한의 동정에 관한 전자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보다 미국의 적국인 중국, 북한을 더 편애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과연 미국이 어떤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한국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마저 중단될 지도 모른다. 첨단 무기체계의 민감한 기술정보가 중국이나 북한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지 미국이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별개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이 중국 또는 북한의 침공을 받아 전시상태가 될 경우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을 통합지휘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동맹국인 미국보다 가상 적국인 중국, 북한에 대해 더 호감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임명하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미국 정부가 과연 주한미군과 수십만 증원병력에 대한 지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의회가 이를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 (3) 일본의 동아시아 위상과 역할 강화

한미동맹의 이완은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와 군사정책 전반에도 변화를 불러옴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군사적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체제에서 일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리라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려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보다 강력히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 과거사 문제 등 한·일 쟁점현안들에 있어서도 점차 미국이 충실한 동맹국인 일본측 입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은 당초 의도와는 반대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외교적, 군사적 역할을 확대시키고 한·일 현안에 관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3.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치

우리가 현재 직면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명백하고 간단하다. 지난 2년간 전개되어 온 동맹관계와 우방관계의 파괴, 한반도 평화보장 체제의 파괴, 군사적 대비태세의 파괴를 모두 원상복구 하고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 조치는 아래 다섯 가지다.

### (1) 대북한 정책의 정상화

- **중북 외교정책을 철폐**하고 북한 핵문제와 여타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복원한다.
- 자유민주주의 우방들과 협조 하에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 및 개혁개방을 위한 **대북한 압박외교**를 전개한다. 과거 서독정부의 대동독 정책과 같이 대북한 경제 지원을 북한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과 철저한 연계 하에 시행한다.
- 외교안보 정책을 대북정책의 종속변수화 한 정부내 정책결정 구조를 혁파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감시.통제 체제를 확립한다.
- 북한이탈주민과 망명자에 대한 안전하고 원활한 한국입국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 (2) 대중국 정책의 정상화

-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버리고 **대중국 굴종외교를 종식**시킴으로써 명실공히 미국의 동맹국으로 완전히 복귀한다.
-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에 역행하는 **대중국 '3불 약속'을 즉각 폐기**하고, 상주의 사드 기지를 즉각 정상가동 한다.
- 아울러, 중국 정부의 부당한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법적, 외교적, 경제적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 (3) 군사적 대비태세의 정상화

-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여 휴전선 일원에서의 대북한 감시, 정찰, 방어훈련, 심리전활동을 재개한다.
-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전면재개** 한다.
- 군 및 공안기관들의 대북한 감시체제와 방첩활동을 복원하고 정상화한다.

### (4)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정상화

-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의 조건 없는 연장과 한.일 과거사 분쟁의 조속

- 한 종식을 통해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을 복원**한다.
- 한반도 및 동아시아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한 **한.미.일 합동훈련을 재개**한다.

#### (5) 우방국 공조체제의 정상화

-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외교적 행동을 함께하고,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 북핵 문제, 북한 인권문제, 동아시아 안보문제 등에 관한 **우방국 외교공조를 복원**한다.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이는 외교적 집단행동, 합동해상훈련 및 연합작전 등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국제문명사회의 완전한 일원으로 복귀**한다.

### 4. 새로운 동맹비전의 필요성

상기 다섯 가지 '정상화' 조치 외에, 향후 우리의 동맹방어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실행할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비약적 국력신장과 군사력, 경제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인식은 다분히 과거 후진국 시절에 머물러있다. 예컨대, 한국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와 국제적 기여에 매우 인색했다. 또한 세계10대 무역국임에도 작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WTO 개도국 지위를 지금까지 고수해 왔다.

우리의 이런 후진국적, 자기중심적 사고는 안보분야에서 더욱 심각하다. 현재 우리 정부와 국민이 갖고 있는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가치관은 후진국 시절 미국과 선진국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군사원조와 안보지원을 받던 시절에 멈춰서 있다. 또한 우리의 안보적 시각은 우리 자신의 안보현안과 남북관계에만 매몰되어, 다른 나라들의 위기와 고통에 무관심했다. 한국전쟁 당시 16개 참전국 수만 명의 생명으로 나라를 지켰고 그 후로 수십 년간 동맹국의 안보지원을 받았으면서도, 한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지원을 당연시하고 상호주의적 지원과 기여 제공에 지극히 인색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면서도, 정작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려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는 한 푼이라도 더 깎는 것이 애국이라는 착각에 익숙해 있다. 이따금 미국의 요청으로 마지

못해 해외파병을 할 때도 전투부대가 아닌 공병부대나 의료부대를 보내는 게 고작 이었고, 그나마도 가장 안전하고 한가로운 지역에 파병하여 눈도장이나 찍고 돌아오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국 미국과 유럽 우방국들이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견해 피 흘려 싸워줄 것으로 믿는 자기중심적 환상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제 세계 유수의 군사국이자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그러한 **과거의 후진국 의식과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버리고 선진국형의 안보관을 정립**해야 할 때다. 우리가 **남으로부터 받거나 기대하는 만큼의 상응하는 안보적 지원과 기여를 남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당연한 이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참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안보문제와 한미동맹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 **(1) 한미동맹의 상호주의적 운용**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동맹관계는 항상 상호적인 것이다. 주한미군은 점령군도 산타클로스도 아니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지원은 상호주의적 조치 또는 상응하는 대가를 필요로 한다. 과거 우리가 가난한 개도국이었을 때는 일방적 안보지원 수혜를 당연시 했으나, 이젠 한국도 **후진국적 사고에서 탈피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현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이 우리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

- **주한미군 현지주둔비용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거의 전액 부담**토록 근본적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주일미군은 일본 방어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한반도와 대만, 남중국해 등 지역방어를 위한 병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96년부터 주일미군 현지비용(기지건설비+현지인건비+군수지원+공공요금)을 거의 전액 부담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 감안시 이제 우리도 일본의 선례를 따를 시기가 되었다.
- 한미동맹의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합동군사훈련과 다국적군에 대한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파병의 경우, 한국의 군사력과 주한미군 규모를 감안하여 최소한 호주, 뉴질랜드 수준의 병력을 파병하고, 공병대나 의무부대가 아닌 전투부대 파병이 바람직하다. 수만 명의 주한미군을 인계철선으로 한국에 붙들어 놓고도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서는 지극히



인색한 현재의 정책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참고로, 일본은 헌법상 해외파병이 금지되어, 1991년 걸프전 이래 수십억 달러 이상의 전쟁비용을 미국과 다국적군에 지원해 오고 있다.

## (2) 한미동맹의 외연 확장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NATO,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국제문명사회를 대표하는 핵심 구성원들로서, 국제무대에서 거의 항상 행동을 함께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파병을 해 줄 나라도 대부분 이들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외연 확장을 통해 이들과의 외교적 공조와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세계 문명사회의 확고하고 불가결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유럽국가들이 NATO를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대응 하고 있듯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불법적 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와 안보협력을 보다 견고하게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일 대중국/대북한 정책공조, 3자 미사일방어 협력, 나아가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5자 간 안보협력** 등은 이를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과거사 문제로 저해되지 않도록 외교적, 국내정치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과 중동 지역에서 벌이는 외교적 공동행동, **합동 해상훈련, 연합작전 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외에 종종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까지 참여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다양한 외교적 캠페인과 합동군사작전들이 참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중국해와 북한인권 등에 관한 외교적 집단행동, 남태평양 합동훈련, PSI 합동훈련,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북한 밀무역 합동해상단속 등이 참여대상이다.

## (3) 자주 국방력의 확충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되, 유사시에 대비하여 **과도한 대미 의존을 피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자주국방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주둔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 증원군의 도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위협으로 추가지원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 북한의 핵위협과 핵공격 대응조치로서, **일본 수준의 전국적 미사일 방어망**을 조속 설치해야 한다. 최소 1-2개 포대의 사드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체제를 전국 규모로 설치하며, 해군 이지스함에 SM-3 해상 미사일방어 체제를 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사일 방어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미국 및 일본 미사일 방어망과 연계된 고도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공격을 미국의 도움 없이 능히 격퇴할 수 있을 만큼 우월한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단 기간 내에 **대규모 재래식 군비 증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핵무기로 미국의 군사지원을 차단할 경우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한국을 능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재래식 군비의 확고한 대북한 우위를 확립하면 북한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 대북한 핵균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독자적 핵역지력 확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독자핵무장, 미국 전술핵 반입, 미국 전술핵 공유, 미국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건 미국의 명시적 동의나 양해가 불가결한 사안이어서, 한.미 간 최고 수준의 정치적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는 한미동맹의 완전한 복원 및 신뢰회복 노력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커다란 국내외적 갈등이 수반될 것이므로, 핵역지력 문제 논의로 인해 긴급한 여타 대비조치들의 시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 【 토 론 】

**문상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손용우**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 토 론 문

## 안보위기의 근본 원인,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前 대한민국 육군 준장

### 1. 안보위기의 근본 원인

#### 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현상

- 지난해 북한이 조건부 비핵화(군사위협해소, 체제안전보장) 협상장에 나오면서,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만 금이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깊은 우려가 있었음.
-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 북한은 애당초부터 핵을 스스로 내려놓은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핵을 내려놓는 척하면서 제재를 해제 받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음.
- 끝내 비핵화 노력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북한 핵의 인질이 되는 것이며, 트럼프의 그릇된 동맹관, 한미 간 동맹의 신뢰 균열로 과연 북한의 핵 공격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엄중한 위기상황임.
- 문제는 우리 사회(정부와 국민)는 이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음. 북한이 연달아 핵실험을 해도, 탄도미사일을 쏘도,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무기를 쏘대도 무감각함.
-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엄청난 재앙을 겪었던 역사적 사례가 있음. (임진왜란, 6.25 전쟁)

## ② 안보를 최고(최우선)의 국익으로 간주하지 않는 인식

- 지난 8월, NSC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할 당시, 미국이 반대하는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맹보다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명분을 제시했던 일이 있음.
-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임.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는 사활의 문제이고 경제는 좀 더 먹느냐 덜 먹느냐의 문제임. 따라서 안보는 사활적 국익이라 할 것임. 그러기에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안보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임.
- 한미동맹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잠재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국익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위협의 원인임.

## ③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추진하는 정책

- 작년 4월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6가지 내용을 발표한 내용 중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의 약속이 있었음. 과연 북한의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우리가 북한에 선의로 다가가면 북한도 선의로 다가올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 하지만, 북한은 분단 이후 우리에게 선의로 대해 온 일이 없음. (6.25 남침, 1.21사태, 8.8 도끼만행, 버마 아웅산 테러, KAL 858테러, 천안함피격 및 연평포격도발, 목함 지뢰도발 등)
- 북한의 일관된 목표는 북한 중심의 통일임. 즉,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은 한 번도 변화된 일이 없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면서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는 속내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덜 자극하고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순간에 그럭저럭 대응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변화나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는 것임.

#### ④ 한미연합연습을 흥정의 도구로 오용(誤用)

- 군대가 존재하는 한 훈련과 연습은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것임.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군대가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전투력 발휘를 기대할 수 없음.
- 한미연합연습은 한미동맹의 상징인 동시에 연합억제력 유지에 필수적인 과정임. 한미는 매년 연례적으로 훈련과 연습을 실시해 왔으며, 우리의 연습은 철저하게 방어적인 것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미는 단 한번도 북한을 먼저 공격한 일이 없기 때문임.
-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핵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주장에 불과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협상 촉진을 위해 한미연합억제력의 기반인 한미연합연습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임. 북한 핵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3대 한미연합연습(KR, FE, UFG)은 중단되고 말았음.

#### ⑤ 정전협정/유엔사에 대한 오해, 평화협정/체제에 대한 환상

- 정전협정은 1953년 체결 이후, 이 땅에 제2의 6.25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유일한 법·제도적 장치임.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관할하는 기구로서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함
- 정전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위협이 소멸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구축될 때까지 유지·준수되어야 함. 유엔사는 정전관리 기능과 함께 유사시 전력을 제공(Force Provider)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엔사를 존중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임.
-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마치 정전협정이 낡은 기제이며, 유엔사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인식하는 그릇된 편견이 존재함. 북한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정전체제를 조직적으로 무력화(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시켜 왔으며, 유엔사 해체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음.
-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님.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준 전례가 없음.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미국과 월맹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철수하자 공산 월맹이

평화협정을 깨고 자유월남을 무력으로 통일한 그 시기부터임. 북한의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대남전략의 일환임. 안보 없는 평화는 환상에 불과한 것임.

- 진정한 평화는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오는 것임. 따라서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검증된 제로(불가역) 상태로 만들고 실질적인 평화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그때까지는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를 확고히 유지해야 함.

## 2.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 ① 현재의 안보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함

- 지난해부터 남북정상회담 3회, 미북정상간 회담 및 만남 3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음. 오히려 북핵미사일 역량은 고조되고, 한미동맹은 이완되는 위기상황이 도래한 것임.
- 김정은이 지난해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핵없는 한반도, 전쟁없는 한반도”를 직접 육성으로 공언했지만, 지금은 이 모두가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음.
-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는 가운데 한일 갈등 고조로 한미일 안보협력마저 이완되고 있음. 이 틈을 비집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동해에서 연합비행을 하는가 하면, 카디즈를 제집 드나들 듯이 휘젓고 다니면서, 급기야 지난 7월에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음.
- 이런 위기상황을 직시해야 올바른 대응이 나올 수 있음. 위기를 얘기하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면서 애써 외면하려 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임

### ② 신뢰에 바탕을 둔 한미동맹으로 복원해야 함

- 동맹의 근간은 신뢰에 있음. 한미동맹은 6.25 전쟁 당시 피를 흘리며 맺어진 혈맹임. 지난 6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고한 동맹이 유지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뢰 때문임.

-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에 진정 동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사드는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동맹의 요청에 따라 배치한 것임. 그렇다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둔, 정상적인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동맹의 도리이며 신뢰를 입증하는 것임.
- 유엔사의 존재와 기능을 존중하고,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있어 공고한 공조를 유지하고, 자유와 인권 등 동일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신뢰임. 특히,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소멸할 때까지(CVID) 대북 제재 전선에 확고한 공조를 유지해야 중·러를 끌어들이 수 있음

### ③ 북핵 무용화(無用化) 전략을 추진해야 함

- 북한 핵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자는 것임. 즉,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봐야 사용할 수도 없고, 핵을 안고 있는 한, 제재와 압박에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뒷받침되어야 함. 김정은 정권이 핵을 움켜쥐고 있으면 패망이고, 내려놓으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아울러, 핵을 사용하려 하는 순간 선제타격, 요격, 대량응징을 통해 죽음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함.
- 핵이 없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제공받아야 함.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함. 동시에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도 병행 추진하고, 만일 미국이 이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불가피하게 비핵화의 길을 버리고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사실상 동맹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임

### ④ 역(逆) 통일전선전략을 구사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함

- 북한은 공산화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일전선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당에 통일전선부(금년 초까지 김영철이 통전부장)를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대남공작을 통해 남남갈등과 체제전복을 노리고 있음.



-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북한 변화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 따라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 북한 체제와 정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의 발전은 환상에 불과한 것임
- 역 통일전선전략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것임.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일임.

### 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실현해야 함

- 북한 핵 문제와 안보위협, 인권문제 등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성취하는 일임. 안보는 위협의 주체를 소멸시킬 때 공고해지는 것임.
- 대한민국의 헌법조항(정신)과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온 국민의 역량과 국제사회의 힘을 결집시키도록 해야 함. (통일독일 사례 적용)
-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김정은이 싫어하니까 통일 언급을 금기시하거나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임.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열정과 꿈이 식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에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만이 진정 한반도에 비핵화는 물론,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며, 주변국의 국익에도 기여하는 길임을 잘 알리고 설득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임.

## 토 론 문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안보연구소장  
前 국방부 대변인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미국에 '나쁜 선물'을 보내면 미국은 군사옵션을 사용할까.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북한이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지 말도록 경고음을 보냈다. 미국의 레드 라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다. 그땐 미국이 군사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브라운 사령관은 "2017년으로 돌아가 우리가 하고 있던 것(군사옵션)들 먼저 털어내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군사옵션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사령관의 톤은 경고가 아니라 북한에 '제발 레드 라인을 넘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는 듯한 느낌이다.

현재로선 북한이 올 연말 미국에 '좋은 선물'을 보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절실한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곧바로 반대 입장을 냈다. 이런 점을 간파한 김정은은 미국의 협상 재개 요청에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해 북한과 회동을 희망했지만, 북한은 외면했다. 속 빈 강정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건 대표가 중국으로 날아갔지만 소득은 별로 없었다.

한반도는 자칫 2017년 위기로 복귀할 상황이다. 그때보다 더 위험하고 복잡하다. 전략적인 상황이 판이해졌다. 북한이 핵무장을 해서다.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트럼프의 북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북한에 핵무장할 시간만 벌여줬다. 2년 전엔 불리했던 북한이 이젠 핵무기(20~60발)와 각종 미사일로 큰소리치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도 쉽지 않다.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라지만 상대방에게 공포심은 충분히 줄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나올 북한의 나쁜 선물은 단거리 미사일 이상의 도발로 보인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형 방사포(다연장포)를 13차례나 발사했

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최근 동창리에서 시험한 미사일 엔진으로 만든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 발사하거나 개량된 ICBM을 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위원장도 어쩌면 마지막 수단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발 시기는 크리스마스 또는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

인공위성과 ICBM 가운데 북한이 선택하기 쉬운 카드는 인공위성이다. '우주 개발 권리가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과거 광명성 발사 때도 북한은 그랬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핵탄두로 교체하면 ICBM으로 변신해서다. 북한은 나아가 인공위성에 정찰위성을 탑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의 표적을 확보하려면 정찰위성이 필수다. 미국은 정찰위성과 고고도 정찰기로 북한 내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북한엔 그런 게 없다.

인공위성보다 수위가 높은 도발은 ICBM 발사다. 북한의 ICBM 발사에는 4가지 강도의 방안이 있다.

첫째는 최소 수준의 ICBM 발사다. 화성-15(사거리 1만3000km)를 일본 열도와 하와이 사이에 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15는 동해에 떨어졌는데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 중 고열과 압력에 타버렸다.

둘째, 그 위 강도는 다탄두 ICBM 발사다. 최근 시험한 엔진으로 제작한 로켓에 다탄두를 탑재해 태평양에 쏘는 것이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에 따르면 2017년 발사한 화성-15는 엔진 추력이 낮아 3~4발의 소형 핵탄두를 실을 수 없다고 한다.

셋째는 더 강한 도발인데 북한이 2017년 8월 슬쩍 설계도를 공개한 3단 로켓형 ICBM인 화성-13 발사다. 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3단형 ICBM이 개발되면 다탄두 핵무기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방안은 북한에도 매우 위험한 도발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태평양으로 쏘아 폭발시키는 것이다. 북한엔 핵무력을 실증하는 실험이지만 미국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을 때 미국 카운트 펀치를 날릴 수 있을까다. 하지만

핵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하기엔 부담이 크다. 북한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이나 워싱턴 등에서 대규모 희생을 감수하고 북한에 군사옵션을 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레드 라인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군사옵션을 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2017년처럼 군사옵션 준비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미군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중이고,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때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군 대비태세를 비교해보자. 2017년 위기 때엔 미 국방부가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미리 증강해놨었다. 당시 일본 이와쿠니·요코다·가데나 기지에 스텔스기인 F-22 및 F-35와 해병대용 F/A-18E/F 수십 대를 배치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B-1B 랜서 및 B-52H 전략폭격기를, 오산·포항엔 아파치 헬기와 F-16과 F/A-18E/F 수십 대가 있었다. 항공모함도 평시 1척에서 '2+2' 체제로 강화됐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다. USNI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일본 요코스카에는 미 항모가 로널드 레이건함 뿐이다. 항모 니미츠함과 루즈벨트함은 미 서부해안에 있다. 대비태세가 한가해 보인다.

반대로 북한은 바쁘다. 김 위원장은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이 전원회의를 일 년에 2번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이 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정의할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대화를 대결로 ▶비핵화에서 핵무장으로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건설에서 자력 부흥으로 ▶미국을 활용한 이익 도모에서 중·러와 협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과 긴장국면에서 장기간 버티는 생존체제를 마련하려는 차원이다.

결국 올 연말엔 북·미 간 결정적 충돌은 낮아 보인다. 북한의 새로운 길 선언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내년 초순이 문제다. 미국이 군사옵션을 꺼낼지, 아니면 북핵을 묵인한 채 압박만 할지도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한국 안보엔 불리하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더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능동적인 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전술핵을 인계철선으로 삼는 핵우산 보장도 중요하다. 한국 독자적인 핵능력 확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 토 론 문

### "한미동맹의 위기 : 새로운 가치와 비전의 필요성"

이용준 전 대사 발제에 대한 토론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플랫폼 자유와 공화 상임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자유와 자존의 관건은 자강력(국방력과 경제력)과 더불어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선진(해양)문명을 같이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다. 또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 70억 인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떤 가치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러시아 등을 움직이는 강력한 지렛대=레버리지(leverage)이다.

그것은 독보적인 기술력에 기초한 산업(부품 소재 의약품 등) 일수도 있고, 독보적 서비스(의료, 금융, 교육 등) 일수도 있고, 투자자, 수요자 파워 일수도 있고, 천연자원(희토류 등) 일수도 있고, 스위스 프랑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일수도 있고, 지리적 위치 일수도 있다.

북한은 미국, 일본, 남한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물류와 군사상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위치를 강력한 레버리지로 삼는다.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등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징용공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정책으로 보여주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강력한 레버리지로 사용한다. 미국은 (미중 무역갈등을 통해) 중국 상품의 최대 소비처로서, 중국이 한국에게 했듯이, 시장을 강력한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생명줄은 중국과 일본에 밀리지 않는 산업경쟁력 등 강력한 레버리지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늘리고 강화하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는 줄이고 약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생명선은 안정된 에너지·자원 수송로와 안정된 통상 환경 확보이고, 이는 자강력에 기초한 일본, 미국과 연대와 동맹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구상에서 육지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경제력 격차가 가장 큰 두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다. 1천년 이상 통일 국가를 형성해 왔고, 지금도 통역이 필요 없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철학, 가치, 정치체제가 가장 이질적인 두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다. 남한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지상 가치로 여기지만, 북한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가장 무시하는 전체주의 국가다. 자주, 통일, 사회주의 강성대국 등을 표방하며, 수령과 당이 인민대중의 눈과 귀를 막고, 손과 발을 묶고, 위계와 서열을 매겨 차별하고, 지배하는 노예제 국가다.

경제력은 남한이 압도하지만, (한미동맹 전력을 제외하면) 군사력과 인민 동원·통제력은 북한이 압도한다. 핵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경제력과 군사력 격차가 크고, 철학, 가치, 정치체제가 이질적인 두 국가가 장기간 공존, 공영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한 사례는 없다. 수령독재체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남한 쪽으로 수렴된다면 몰라도, 절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없는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 관계다. 그런데 북한은 수령독재체제, 즉 인민의 가축화, 노예화 체제를 바꿀 의사를 피력한 적 없다.

통일을 꿈꾸는 대다수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한 체제의 연장으로서 통일을 꿈꾼다. 남한 주도 통일을 너무나 당연시한다. 그러니 통일대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구가 두 쪽 나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 주도의 통일을 꿈꾼다. 문명 수준과 정치체제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 주도의 평화통일을 국시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여간 넌센스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 두 정부와 우리 민족(국민·인민)의 거대한 무지, 착각이거나 사기, 위선이다. 이것이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의 근원이다. 한반도 양국 체제가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다.

우리 사회의 지독한 균열과 갈등, 저성장과 저활력에 따른 우울한 미래가 간절한 평화와 통일(북한개발투자 등) 열망을 만들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비이성적 열광과 환상을 낳았다. 이제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북핵 대응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1980년대 말부터 표면화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여년 간 북한과 한국, 미국은 계속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해왔다. 역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남한이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 미국이 확고한 체제안전을 보장하면(선제공격 의사가 없음을 문서와 의회 결의로 확인해주면),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를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핵 보유 동기를 오판하고, 의지를 과소평가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정권 교체기(2016~17년)를 틈타 집중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공언했다.金正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공언했다. 이로서 북핵 문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 북한은 이제 핵은 핵대로 갖고, 핵 공갈로 제재도 풀고, (금나라가 남송을 약탈하듯이) 싸울 의사가 없는 부유한 남한을 약탈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뭔가 큰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대가를 주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낸다는 빅딜 패러다임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핵 개발 중이던 시대와 달리 2018년 이후는 과거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북한 철도 건설 지원 등은 돈으로 노예평화를 사려는 조공 행위에 다름 아니다. 물론 평화를 살 수도 없지만. 9.19 군사합의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다.

문재인정부는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를 전혀 끌어내지 못하였다. 북핵 협상 30년 역사를 반추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용도가 다한 낡은 영변 핵시설 파괴와 제재완화를 맞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선결조건으로 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핵 선제 불사용, 비확산' 등 핵확산 금지조약 상의 핵보유국 의무 준수를 천명했다. 이는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정부가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한반도 전쟁 위협 해소는 미국과 한국의 정부 교체기(2016~17년)를 틈탄 북한의 압축적 핵·미사일 시험 후, 국제사회의 응징을 회피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충실히 부응해 준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더 고도화 하여, 비핵화는 더 멀어졌고, 노예 평화는 더 가까워졌다.

지금은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는 아직 완전히 물 건너 가지 않았다. 북한이 2019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북한 비핵화 원칙(CVID)에 대한 일괄 합의와 단계적 이행은 여전히 뒤로 물릴 수 없는 원칙이다. 그 시작은 북핵 리스트 제출이 되어야한다.

비핵화 요구를 지속하되, 비핵화 불가시 남한에 대해 핵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무엇보다도 핵을 갖고 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제재와 한 차원 높은 군사적 방어, 응징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비핵화의 최대 걸림돌인 김씨 3대세습 수령체제를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 체제의 인민과 시장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는 협력하면 안된다. 인민의 자유, 인권, 개방(정보) 확대, 강화를



요구해야한다. 세계시민들과 함께 북핵 폐기와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다면 9.19 군사합의는 폐기하고, 최소한 미국과 나토 수준의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다.

## 토 론 문

# 핵균형 : 북한의 핵무장 對 한국의 핵무장 - 2020년 전망과 대응방안 -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 1. 북한의 핵무장과 동북아정치체제

□ 북한의 핵무장으로 북방대륙세력(북중러) 對 남방해양세력(한미일)은 핵불균형이 형성됨에 따라 양 진영의 세력균형과 공격방어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

- 북방대륙세력이 방어보다 공격적인 핵군비증강을 추구함으로써 역내 핵안보딜레마를 자극하면서 핵군비경쟁은 더욱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

- 북방대륙세력의 맹주인 중국은 미국에 균형하는 [극성]이 되고자 하며, 핵무장 북한은 반미대결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미국의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

□ [중국의 입장] : 중국은 북한을 기존의 재래식에 기반한 [전략적 완충지대]의 가치를 넘어 핵전력에 기반한 [전략적 핵지대]라는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인정.<sup>1)</sup>

- 중국은 은닉이 가능한 북한의 제3차 우라늄 핵실험(2013)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역내 핵도미노(한국과 일본)만 막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

- 중국은 한국의 핵군비태세를 사전에 강력하게 막는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반대에 과도한 반대 액션을 구사.

- 북한의 생존(survival)은 중국의 사활적 이익이며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 입장 옹호.

-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허상에 불과.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대북압박은 형식에 그칠 것임.

1) 냉전기 중국은 북한이 자국의 핵우산 영향권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원치 않았으며 지원도 하지 않았음.

□ **[러시아의 입장]** : 냉전기 북한의 핵개발 최대 후원자는 구소련.

- [북중러 對 한미일] 구조를 강화하려는 러시아도 중국과 같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이미 인정한 것으로 분석.

□ **[일본의 입장]** : 고도의 핵잠재력을 보유한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을 자국의 군비증강과 보통국가화 실현의 명분으로 활용.

- 일본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처럼 긍정도 부인도 않는(NCND) 정책으로 핵무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 동북아의 이스라엘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도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으로 판단.

## 2. 북한의 핵무장 전략과 비핵화 사기극

### 1) 북한의 60년 핵무장 전략

□ **[핵무장 목표]**: 6.25전쟁 이후부터 소련의 지원으로 핵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보복에 기초한 대미 억지력 및 선제공격력 확보와 제2의 대남 무력통일기반인 핵무기체계의 구축.

□ **[핵무장 능력]**: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중성자탄, 수소탄 등 4종 핵탄두 모두 보유. ICBM 포함 모든 운반수단 확보<sup>2)</sup>.

- 핵독트린 선포(2013)<sup>3)</sup> ⇒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2017) ⇒ 핵무기 병기화 선언(2018) ⇒ '새로운 길' 선언 예정(2019)

- 북한은 수소탄 실험을 하지 않은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능력을 뛰어넘어 안보리 핵보유국에 이어서 핵서열 세계 6위, 핵도발 공격성은 세계 1위.

- 2019년 12월 현재 북한의 핵탄두는 최소 40개 ~ 최대 80개로 추정. 최근 동창리 '중대한 시험'(12.7, 12.13)은 ICBM 엔진추력 고도화 및 재진입(Reentry) 기술 시험으로 추정, 곧 다탄두 개발도 예상.

- ICBM 재진입기술의 완성은 핵무기체계의 완성과 실전배치의 완료 의미. 파키스탄처럼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 확보가 북한의 남은 과제.

---

2)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미전역을 사정권에 둔 화성15(13,000km) 시험 발사 성공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

3) 북한은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라는 법령을 통해서 공식적인 핵독트린을 선포.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가 억지용, 보복용, 선제타격용이라는 권리와 아울러 비확산, 핵군축 등 핵보유국의 의무도 명시. 핵독트린 선포는 곧 핵보유국 선언을 의미.

### 【탈냉전기 북한의 핵무장 역사】

정권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			
시기	제1, 2차 북핵위기 (1993~2011)		제3차 북핵위기 (2012~현재)			
탄두	원자탄 시대		수소탄 시대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시기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폭탄	원자탄	원자탄	원자탄	원자탄	원자탄	수소탄
원료	플루토늄	플루토늄	«우라늄»	증폭핵 분열탄	증포핵 분열탄	«수소탄»
지진	3.9	4.5	4.9	4.8	5	5.7~6.3
위력	1kt 미만	3~4kt	6~9kt	7~10kt	10kt	50~수백kt

※ 제3차(우라늄) 및 제6차(수소탄) 핵실험은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의 중대한 전환점.

## 2) 북한의 30년 비핵화 사기극

□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거짓된 명분을 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을 펼쳐왔음.

-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에 노후화된 영변 핵시설의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와 아울러 암묵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 받으려는 사기 전략을 펼치려고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거절로 무산.

- 트럼프 정부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말려드는 것은 국제비확산정책의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선거득표 전략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을 하노이 회담 때 이미 내린 것으로 분석.

## 3. 2020년 전망: 김정은 정권, 트럼프 정부, 문재인 정부

### 1)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길?

□ 북한은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의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

- 새로운 길은 2019년 12월말 노동당 전원회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2020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보완적으로 재천명될 것으로 예상. 북한은 아래 두 가지 옵션 중 Plan B 선택의 가능성이 큼.

<b>[Plan A]</b> <b>비핵화 사기극</b> <b>지속 옵션</b>	▶ 목적: 지속적인 비핵화 사기극을 통한 시간끌기 속에서 핵보유국 지위 달성 -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 ⇒ ICBM 시험 발사 ⇒ 북미 갈등과 군사적 긴장 유지 ⇒ 2021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 재개 모색
---	--

<b>[Plan B] 핵보유국 선언 옵션</b>	<p>▶ 목적: 비핵화 사기극을 스스로 접고 핵보유국 지위 조기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 협상 완전 중단 선언(비핵화 사기극 종언) ⇒ 독자적 핵보유국 천명 ⇒ 핵무기 실전배치 완료 선언.</li> <li>- 최근 북한이 김정은을 앞세운 백두 빨치산 혁명정신의 강조는 2020년 핵보유국으로 가는 새로운 고난의 행군을 알리는 신호탄.</li> </ul>
------------------------------------	---

## 2)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 트럼프 정부의 최대 대북압박정책은 강점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반도 전략과 한미동맹 정책에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것이 최대 약점. 미국은 아래 두 가지 옵션 중 Plan B를 선택할 가능성이 큼.

<b>[Plan A]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대선 관리 차원에서 최대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인내(시간끌기) 속에서 협상 재개 모색.</li> <li>- 종전선언, 주한미군 변화 등 한반도의 중대한 현상변경을 또 다른 당근으로 제시할 가능성.</li> </ul>
<b>[Plan B] 화염과 분노 작전계획 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맞대응 전략으로 2017 화염과 분노를 작전 계획 및 훈련 수준으로 전개.</li> <li>-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접근 방안이 대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은 6.25 이후 최고로 고조될 것임.</li> </ul>

☞ 향후(3~5년)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용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응하여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현실적으로 용인할 것으로 판단.

## 3)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 2020년 미북 간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국면이 예상됨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對 민족공조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가운데 양쪽의 신뢰를 모두 잃는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가능성.

-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조선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견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중재자, 운전자 역할 고수.

- 2019년 지소미아 파기 시도는 반일, 반미 기조 속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3불 원칙<sup>4)</sup> 중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사실상의 친중정책을 실천한 것임.

4)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MD체계,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 원칙을 중국에 약속.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020년은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의지 對 중국의 결사반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친미 對 친중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

#### 4. 우리의 대응방안 : 일차적 전술핵 재배치 → 궁극적 핵무장 추진

□ 미국의 핵우산(확장핵역지)은 오늘날 핵무장 북한에게 더 이상 군사적인 억지신뢰성과 정치적인 공포신뢰성을 제공하기에는 한계에 직면.

- 미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강화라는 핵우산 강화 정책도 북한에 대한 [간접역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고민하고 공론화하고 추진해야 함.

- 작금(3~5년)에 가장 현실적인 것은 전술핵 재배치이지만, 궁극적(5년 이후)으로는 자체 핵무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임.

<b>[Plan A]</b>  <b>핵공유</b>  <b>전술핵 재배치</b>	<b>▶ 북한의 핵무장과 간접역지에 기반한 핵균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과거 냉전형 전술핵 재배치는 무용지물. 이 경우 북한의 핵도발 명분만 제공하고 선제공격의 유인으로 작용.</li> <li>- 새로운 전술핵 재배치는 NATO식 보다 높은 수준의 전술핵 운용 및 통제에 대한 한미간 핵공유가 전제되어야 함.</li> <li>- 최소한 전술핵 50여기 배치 필요. 폭발력 수백kt 내외의 전투기 투하용 B-61계열 핵폭탄 30기와 참수작전과 정밀타격을 위한 10kt 내외의 핵탄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20기 포함.</li> </ul>
	<b>☞ 질문 : ①NATO 수준 이상의 미국과의 핵공유가 과연 가능한지? ②미국으로부터 전술핵 [전시 핵통제권]을 이양 받는 방안은 어떤지?</b>
<b>[Plan B]</b>  <b>자체 핵무장</b>	<b>▶ 북한의 핵무장과 직접역지에 기반한 핵균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술핵 재배치는 어떠한 조건이든 간접역지라는 또 다른 한계.</li> <li>- 북한과 직접역지에 기반한 완전한 핵균형은 자체 핵무장밖에 없음.</li> <li>- 이 경우 남북간에는 공포의 균형으로 인한 상호확증파괴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됨.</li> </ul>
	<b>☞ 질문 : 남북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한 후 핵군축회담은 가능하지만 적대 핵보유국간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b>

#### 【남북한 핵무장 비교】

□ NPT 제10조 1항은 국가의 비상사태와 직결된 탈퇴 권리를 명시.

- 북한의 핵무장은 도발용(공격용)인 반면 한국의 핵무장은 방어용(평화용)

-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의 비상사태 없이 NPT 탈퇴.
- 한국의 NPT 탈퇴 권리는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존재.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이미 파기됐으며, 이제는 한국의 핵안보 주권을 가로막는 불효자 역할.
- 북한의 핵무장은 역내 불안정에 기여. 한국의 핵무장은 역내 안정에 기여.
- 한국의 국내여론은 과반 수 이상이 핵무장 찬성. 국제여론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NPT 탈퇴를 강행할 경우 그 후과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임.
-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전제로 NPT에 조기 복귀한다는 조건부 탈퇴를 국제사회에 약속.

	북한의 핵무장	한국의 핵무장
목 적	전쟁의 핵무장(공격용)	평화의 핵무장(방어용)
NPT 탈퇴	탈퇴 권한(x)	탈퇴 권한(o)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6차 핵실험으로 완전 파기	파기 선언 필요
동북아 영향	역내 불안정 기여	역내 안정 기여

## 5. 결론: 북한의 핵무장 對 한국의 핵무장

□ 김일성의 [주체정치]와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핵심 유훈은 핵무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며 3대 김정은의 [핵무력 정치]에서 달성시킴.

- 1세대와 2세대의 리더십의 장단점을 학습한 김정은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핵 對 비핵의 군비증강의 장단점을 학습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

□ 3대 김씨 중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안하무인격인 김정은 정권의 핵위협과 핵공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공포화 될 것임.

- 더 큰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위협과 공갈에 차츰 익숙해지면서 심리적인 패배의식이 만연해짐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스스로 유인하는 결과를 자초.

□ 적대국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핵균형 전략을 모색하는 것임.

- 그러나 기존의 핵우산과 현재 논의되는 전술핵 재배치는 간접억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에 직접억지의 핵균형을 달성하는 궁극적인 수단은 자체 핵무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것임.

□ 한국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김정은의 정권교체(regime change)와 북한의 체제전환(change of political system)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이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이라는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수령제에서 사회주의 집단지도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임.

□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정직한 평화]가 아닌 [거짓된 평화]를 국내외적으로 선포해왔음.

- 정책의 정직성을 확립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와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저자세 탈피가 최소한의 중재자·촉진자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현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고 핵균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함.

-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권정당으로서 야권(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우리공화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가 공동으로 [핵균형전략워킹그룹]을 설치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